

우루무치 7·5사건의 성격과 중국정부의 대응 전망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 II. 사건의 성격
- III.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전망

I. 들어가며

2009년 7월 5일,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城都)인 우루무치(乌鲁木齐)에서 대규모 유혈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184명이고, 수천 명이 다쳤으며, 역시 수천 명이 투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주요 8개국(G8)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길에 올랐던 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 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7월 7일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2차 무력충돌이 발생한 직후인 8일 급거 귀국했다. 또 프랑스, 터키 등 국가들이 입장을 표명했고, ‘알-카에다’는 중국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 사건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에서 발생한 시위를 ‘군체성 치안사건(群体性 治安事件)’으로 표현한다. 그중 500명 이상 모인 것은 대규모 군체성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 대규모 군체성 사건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12만7천467건이 발생했다. 즉 하루에 350건 정도로 그만큼 대규모 시위가 국가의 크기에 걸맞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위만큼 그 피해규모가 컸던 적은 드물다. 물론 관방이 작성한 통계가 일정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선 경우는 거의 없다. 작년 티베트 시위만 해도 비공식 통계로 80여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그 피해규모가 컸고, 이제까지의 시위 양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중국의 주류 민족인 '한(漢)'족이라는 점도 이번 사건에 중국 당국이 긴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 지역은 중국의 영토라고 하기에는 역사적, 문화,

인종적 이질감이 매우 강하다. 우선 이 지역이 중국의 역사에 복속된 것은 1884년 청조 때이고, 그 이전에는 독립된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의 명칭이 ‘신장’인 것도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인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1944년 동투르크스탄 공화국 건립 선포를 비롯한 대소규모 독립투쟁이 벌어졌다. 문화적 인종적으로도 이 지역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에도 존재하는 위구르인이 다수 정착한 곳이며, 이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중앙아시아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곳을 중국 정부는 계속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특히 구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독립 추진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중국 당국에 의해 지목받고 있는 ‘동투르크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조직도 1993년에 해외에서 결성되었다. 또 작년 3월의 중국 남방항공 CZ6901 폭파기도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저항운동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의 무한성 때문이다. 이 사건의 발생은 중국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01년부터 테러와 분리주의에 대한 타격 등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창설해 주도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키르기스스탄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임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주체 중 하나인 위구르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처리 과정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과 적대 조치 등이 부각된다면 중국은 곤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경제원조 등으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왔다면 이번 문제는 종족과 종교 탄압이라는 1차적인 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이슬람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자원 확보 등의 경제적 차원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 또한 존재했다. 그러나 이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터키와 이란이 비난과 우려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이슬람 국제기구들은 연일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도 중국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위구르인들의 선제 도발로 인한 것이고, 실제 사망자도 한족이 더 많은 것을 부각시키며 사건의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강경진압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종교 탄압적인 행위도 이들 국가 및 단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이 사건을 “외부 세력의 조종과 선동 하에 내부 세력이 실행한 계획적이

고 조직적인 폭력범죄” 라고 규정하고, 책임자와 적극 시위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리와 단순 가담자와 무고한 사망 내지 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등 양 측면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루무치 7·5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비롯한 한국 내 시민단체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물론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측면에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내 소수민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시각과 관점 확보의 차원에서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II. 사건의 성격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루무치 7·5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그 관점과 시각을 정리해보자.

1) 내재적인 민족 갈등과 차별의 폭발인가? 조직된, 계획된 독립 기도인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현재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고착화되고 내재화되어 있는 한족의 위구르족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의 폭발이라는 설과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조직되고 계획적인 분리주의자의 독립기도라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설은 모두 일리가 있다. 먼저 한족의 위구르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은 일반인의 예측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보인다. 실례로 이번 사건의 계기라고 알려진 남부 지역 광둥(广东)성 샹오관(韶关)시에서 벌어진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충돌 사건이 중국의 반대편 서북 지역의 우루무치의 시위로 이어진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우루무치가 속해있는 서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성과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시작된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이 지역은 2003년 이후 매년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소수민족 발전계획’에 따라 이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위구르인들에게는 오히려 입지 및 정체성 약화로 귀결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경제 성장의 대부분의 성과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1949년 당시 75%였던 위구르족의 비중은 최근 들어 45%로, 당시 5%에 불과했던 한족 비중은 41%로 증가했다. 즉 경제적 발전이 가져다준 성과는 위구르족에게는 2등 민족으로의 고착화와 민족의 해체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발단인 샤오관에서의 사건은 2007년에 실시한 소수민족 발전 계획에 따라 생면부지이자 반대편인 중국 남쪽으로까지 취업을 위해 대규모로 파견되었던 위구르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독립 기도라는 설 역시 일리가 있다. 이의 반증으로 어느 때보다도 신속했던 중국 정부의 언론 보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총기 사용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초기의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다수의 한족의 피해 사례들은 자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발표이지만 초기 사망자 중 한족이 137명으로 위구르족의 46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한다. 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와 연계가 있는 이 지역의 저항 조직들을 견제하고 색출하기 위해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라는 국제기구를 만들 정도로 그 조직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고착화되어가는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불평등, 위구르족의 정체성 약화와 쇠퇴 등으로 인한 내재된 불만이 샤오관 사건이 불씨가 되었고, 기존에 존재하던 이 지역 독립 기도 세력들의 일련의 계획과 지휘가 합쳐지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인다.

2) 미국은 작년 티베트 사건과는 다르게 왜 침묵하고 있는가?

작년의 티베트 사건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만이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쌍방에 주문하고 있는 정도이다. 왜 일까? 기실 이는 미국의 기존 태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위구르족을 제외한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매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 당국이 대미관계에서 꺾끄러워하는 주요 부분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소수민족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이 위구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이들의 종교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이슬람권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사건이후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애매하던 중미관계가 2001년을 기점으로 화해무드로 돌아선 배경으로 중국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역시 이번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권에 대해 경계해야할 필요가, 중국으로서는 서북 지역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 분리주의자에 대한 견제가 공통분모로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선뜻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티베트 시위 등 다른 소수 민족 독립 사건과는 달리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적인 보편 가치에 대한 이중 잣대 즉 자국의 이익과의 상충여부에 따른 서로 다른 잣대의 사용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자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알-카에다의 중국에 대한 보복 선언은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또 다

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상징적 단어인 G2로서 인정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3)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다른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현재 중국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이다. 이미 터키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터키 총리는 이번 사건을 ‘학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게 중국을 비난했다. 또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걸프협력기구(GCC)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UN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도록 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입장 발표는 미루고 있지만, 국내 여론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조직들은 13일 중국 내 이슬람교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전 즉 지하드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아쉽고, 대부분 국가들도 대의체제의 미비, 소수 민족 문제의 미해결 등의 중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즉각적으로 중국과 날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해결과정에서 중국 측의 학살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가 드러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하겠다.

Ⅲ.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전망

결론적으로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한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지만, 그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중국 사회의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 방향은 그야말로 이념에서 경제의 시대이며, 그 핵심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급속한 경제발전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사회주의라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성장이 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민족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래 소수민족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 주류사회에서의 소외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육, 지리, 문화 등에서 열등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소외라는 이중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은 향후 한족 부유 계층이 1등 국민, 한족 빈곤 계층이 2등 국민이라면 3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같은 상황을 호전시킬 마땅한 대안을 찾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이제까지 양면 정책으로 소수민족을 관리해왔다. 즉 소수민족 독립 기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봉쇄하되, 순응자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소수민족은 순응해본들 결국 거대한 중국에서 자신들의 입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대부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그 방향은 향후 더욱 소수민족 독립 기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가능한 모든 무력 조치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소수의 순응자들에 대한 우대와 상반되게 다른 이들은 중국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즉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화' 되어 하층계층화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 극소수의 순응자들은 관직에 등용하고, 점점 더 많은 소수민족 젊은이들은 각지의 대도시에 취업을 알선하여 시장경제 체제에 밀어 넣고, 나이 든 소수민족들은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과 공예품 등을 팔게 하면서 고립시키고, 과격분자들은 가두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제 2, 제3의 우루무치 7·5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해있다.(2009/07/17)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